

1. 총평

(1) 2021년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는 국가직 7급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다.

상	14
중상	8, 9, 18, 19, 20.
중	5, 6, 7, 10, 13, 15, 16, 17.
중하	1, 2, 3, 4, 11, 12.

- (2)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14번 문제(조직에 대한 Morgan의 관점)로서, 2021년 국가직 인사조직론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주제이다. 해당 내용을 보았다라도 정확하게 8가지를 이해하고 암기하지않은 경우 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 (3) 난이도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8번, 9번, 18번, 19번, 20번 문제라고 본다. 9번 문제(고충처리), 18번 문제(전자정부법)와 19번 문제(국가재정법)는 법령 문제로서, 법령의 세세한 내용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일부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으나, 알파행정학에서 다루고 있는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였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 (4) 8번 문제(툼슨의 기술의 유형)는 교재 및 강의에서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난이도를 ‘중상’으로 분류했지만,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 (5) 20번 문제(사회실험)는 조금 어려운 지문도 있으나,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 (6) 이외에 새롭게 출제된 내용으로서 6번 문제의 규제샌드박스제도 등이 있으나, 알파행정학에서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풀 때 별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본다.
- (7) 한편, 이번 시험문제도 행정학 제반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령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암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해 알려주고 있다.
- (8) 이와 같은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85점 이상(알파행정학으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90점 이상)우수, 75점에서 80점까지는 보통, 70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고 본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기초이론	1 개념문제 -
정책학	5 이론문제 9
조직이론	4 학자문제 5
인사행정론	4 법령문제 6
재무행정론	3
지방자치론	2
행정환류론 (전자정부론)	1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기초이론 출제 빈도가 낮은 편이고, 정책학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출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역별 출제빈도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이론문제를 넓게 볼 경우 14문제이고, 법령 문제가 6문제이다. 학자의 입장을 묻는 문제의 경우 이론 문제에 해당하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필요한 문제이고, 법령 문제 또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필요한 문제이다.

3. 당부 사항

- 1)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항상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
-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특정 학자의 입장이나 법령 내용)은 암기해주면 된다.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제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균형인사정책)란 인종·성별·출신·종교·직업·계층·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 ②(0). 엽관주의는 정당정치 및 민주정치와 관련되며,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국민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통제의 강화와 책임행정의 구현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정무직과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엽관적 임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 ③(0). 실적주의(Merit System)란 인사행정이나 공직 임용의 기준을 개인의 능력·자격·성적에 두는 제도이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지면서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 ④(0). 엽관주의에 따른 인사는 집권 정당의 당원들을 정부 관료로 채용하기 때문에 관료기구나 집권 정당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가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공무원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다.

[정답] ①

☞ 참고 : 2022 7·9급 알파행정학, pp.

4. 예산 분류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지방7급

- ①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단점은 회계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 ② 예산의 조직별 분류의 장점은 예산지출의 목적(대상)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이다.
- ③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장점은 국민이 정부 예산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다.
- ④ 예산의 품목별 분류의 단점은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해설] ①③(0).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에 따라 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총괄적 분류에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부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시민을 위한 분류). 그러나 기능별 분류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회계책임이 명확하지 못하며, 입법부의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X). 조직별 분류는 예산을 부처별 또는 소관별 분류하는 방식이다. 조직별 분류는 사업의 목적이나 활동을 밝히기 어렵고, 지출의 목적이나 예산의 성과 파악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0). 품목별 분류는 정부가 일을 해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들, 즉 지출 대상에 따라 분류하는 제도이다. 품목별 분류는 세부적으로 예산을 분류하기 때문에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정부공무원들의 재량의 여지를 줄이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품목별 분류는 통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②

☞ 참고 : 2022 7·9급 알파행정학, pp.524-541.

5. 다음에서 제시하는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지방7급

○ 정책의 본질이 미래지향적 문제 해결에 있고, 정책결정에서 가치비판적 발전관에 기초한 가치지향적 행동 추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 기존 정책이나 사업의 매몰 비용으로 인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는 방식이다.
- ② 문제가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 일시적 참여자(part-time participants)가 전제조건이다.
- ③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타협을 통한 봉합을 모색한다.
- ④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목표산출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설] ④(0). 문제 박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합리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합리모형은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대안의 탐색·선택을 추구하는 이론이다. 합리모형은 매몰비용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X).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는 방식은 합리모형에 대비되는 적응모형과 관련된다. 적응모형의 대표적인 형태인 사이버네틱스모형에서는 환류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몇 가지의 정보에 따라 시행착오적인 적응을 한다.
- ②(X). 문제가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 일시적 참여자(part-time participants)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모형은 쓰레기통모형이다.

- ③(X).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타협을 통한 봉합을 모색하는 모형은 회사모형(연합모형, 타협모형)이다.

[정답] ④

☞ 참고 : 2022 7·9급 알파행정학, pp.285-299.

6.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지방7급

- ① 종합편성 채널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를 확보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는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보다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피규제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 ③ 우리나라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 ④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경제적 규제는 고객정치로 분류되며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된다.

[해설] ①(X). 종합편성 채널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를 확보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경쟁적 규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특정한 권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이다.

한편, 보호적 규제정책은 각종의 민간 활동이 허용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국민 대중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정책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산업안전법, 근로기준법(장시간 근로 제한 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②(O).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규제방식으로서,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규제방식인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보다 피규제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피규제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 ③(O). 규제 샌드박스(sandbox)는 기존 시장에 없는 창의적·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일정한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 융합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신속 처리,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규제혁신 3중 세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④(O). 고객정치 상황의 범주에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각종의 직업면허, 각종의 사업인가 등과 같은 대부분의 경제적 규제가 포함된다. 이에 반해 기업가적 정치 상황의 범주에는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물품규제 등과 같은 대부분의 사회적 규제가 포함된다.

[정답] ①

☞ 참고 : 2022 7·9급 알파행정학, pp.74-82, 227-228.

7.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지방7급

- ①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외부 환경이 행정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으로 환경에 대한 행정의 주체적인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② 후기행태주의는 적실성(relevance)과 실천(action)을 강조하고,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였다.
- ③ 공공선택이론은 권한이 분산된 여러 작은 조직들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것보다 단일의 대규모 조직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선호한다.
- ④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경로의존성과 관성적인 성향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해설] ①(O).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외부 환경이 행정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으로 환경에 대한 행정의 주체적인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생태론은 행정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간과하였으며,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O). 후기행태주의는 급박한 사회문제 해결을 중시하며 적실성(relevance)과 실천(action)을 강조한다. 그리고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였다.

③(X).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비시장(non-market) 분야에 대해 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현상을 설명·분석하고 처방을 모색하는 이론체계이다. 공공선택론은 집권적이며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는 정부 관료제는 시민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과 생산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공공재의 공급과 그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부합시킬 수 있도록 공급 영역을 설정해야 하며,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각 수준에 맞는 분권적이고 다양한 규모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④(0).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지속성과 경로의존성을 지닌다고 본다. 이로 인해 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③

☞ 참고 : 2022 7·9급 알파행정학, pp.125-158.

8. 톰슨(Thompson)의 기술 분류에 따른 상호의존성과 조정 행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21지방7급

- ① 집약형 기술(intensive technology) - 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 - 정기적 회의, 수직적 의사전달
- ② 공학형 기술(engineering technology) - 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 - 사전계획, 예정표
- ③ 연속형 기술(long-linked technology) - 교호적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 - 상호 조정, 수평적 의사전달.
- ④ 중개형 기술(mediating technology) - 집합적 상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 - 규칙, 표준화

[해설] ④(0).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④번이다.

기술	구조(상호 의존성)	조정 방법	조정 난이도	추가적 방법
중개적 기술	집단적·집합적(pooled)	표준화	가장 용이	전담 직위로 참모 설치
길게 연결된 기술	순차적·연속적(sequential)	계획	중간	위원회 설치
집약적 기술	교호적(reciprocal)	상호 적응	가장 곤란	project team, task force

[정답] ④

☞ 참고 : 2022 7·9급 알파행정학, p.403.

9. 공무원고충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지방7급

-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다루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 ② 고충처리대상은 인사·조직·처우 등의 직무조건과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상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 ④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해설] ①(0).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정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0).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정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0).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효력의 구속력은 없다. 다만, 임용권자에게 결정 결과에 따라 고충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④(X)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 가능).

한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다르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따라서 ④번 지문에서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정답] ④

☞ 참고 : 2022 7·9급 알파행정학, pp.521-523, 618.

10. 프레스먼(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의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관한 오클랜드 사례분석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지방7급

- ① 정책집행에 개입하는 참여자의 수가 적어야 한다.
- ② 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③ 정책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가 단순해야 한다.
- ④ 최초 정책집행 추진자 또는 의사결정자가 지속해서 집행을 이끌어야 한다.

[해설] 1973년 Pressman & Wildavsky의 「집행론」은 1966년에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캘리포니아 주의 오클랜드 지역 흑인취업프로그램(2,500만 달러 연방정부지원사업으로 3,000명의 실업자 구제 목표, 그러나 1969년까지 20여 개의 일자리만 창출)을 분석하여 정책집행이 실패한 이유를 밝혀내었다. 이들이 제시한 실패 이유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요건을 추론할 수 있다.

- ①(O). 과도한 참여자 : 집행 과정에서 참여기관 및 참여자가 너무 많았다. 13개의 기관이 참여했는데, 이들의 관점, 목표, 사업진급성에 대한 인식 등이 제각기 달랐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에 개입하는 참여자의 수가 적어야 한다.
- ②(X). 공동행동의 복잡성 : 중간 기관을 통한 집행 때문에 많은 결정점(decision point)으로 인한 공동(합동)행동의 복잡성이 집행 과정을 마비시켰다(50개의 상호 독립적인 의사결정점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은 각 의사결정점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90%인 경우 약 0.5%이다). 따라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하나의 기관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③(O). 정책의 복잡성 : 정책이 단순하지 않았던 까닭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가 단순해야 한다.
- ④(O). 중요한 리더의 교체 : 상공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이 사업을 주창했던 E. Foley와 같은 핵심 인물의 보직이 변경되면서, 정책 추진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최초 정책집행 추진자 또는 의사결정자가 지속해서 집행을 이끌어야 한다.

[정답] ②

참고 : 2022 7·9급 알파행정학, p.308.

11. 다음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지방7급

- 행정수반이 인사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인사기관의 장은 행정수반을 보좌하여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 인적자원 확보, 능력발전, 유지, 보상 등 인사관리에 대한 기능을 부처의 협조 하에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 인사기관의 결정과 집행의 행위는 행정수반의 승인과 검토의 대상이 된다.

- ①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② 인사기관의 구성방식을 통해서 인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③ 합의에 따른 결정방식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한 명의 인사기관의 장이 조직을 관장하고 행정수반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된다.

[해설] ④(O). 문제 박스의 내용은 비독립 단독형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비독립단독형에서는 행정수반에 의하여 임명된 한 사람의 기관장이 의사결정을 한다. ①②③은 독립합의형에 대한 설명이다.

구 분	독립합의형(위원회형)	비독립단독형(집행부형)
의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행정부에서 분리되어 있으며,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1883년~1978년), 실적제 <u>도보호위원회(MSPB, 1978년 이후)</u>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수반에 의하여 임명된 한 사람의 기관장이 의사결정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신처, 그리고 1978년 이후의 미국 인사관리처(OPM) 등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염관주의나 정실주의의 영향력 배제,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 보장 및 실적제 발전</u> •<u>신중한 의사결정</u> •<u>인사행정의 계속성 확보(staggering term)</u>z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인사행정의 책임 소재 명화</u> •<u>중요한 인사정책의 신속한 결정 가능</u> •<u>행정수반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 확보</u>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인사행정의 책임 소재 불분명 및 책임 전가</u> •<u>인사정책의 결정 지연, 신속적 대응 곤란</u> •<u>행정수반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 확보 곤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결여</u> •<u>인사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 결여</u> •<u>양당적·초당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 곤란</u>

[정답] ④

☞ 참고 : 2022 7·9급 알파행정학, p.520.

1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지방7급

- ① 카플란(Kaplan)과 노턴(Norton)은 균형성과표(BSC)의 네 가지 관점으로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재무적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을 제시하였다.
- ② 민츠버그(Mintzberg)는 조직의 5개 구성 요소로 전략적 최고 관리층, 중간계선관리층, 작업층, 기술구조, 지원 막료를 제시하였다.
- ③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가 높은 경우 지시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 ④ 베버(Weber)는 법적·합리적 권한에 기초를 둔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의 특징으로 법과 규칙의 지배, 계층제, 문서에 의한 직무수행, 비개인성(impersonality), 분업과 전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해설] ①(O). 카플란(Kaplan)과 노턴(Norton)은 균형성과표(BSC)의 네 가지 관점으로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재무적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을 제시하였다.

②(O). 민츠버그(Mintzberg)는 조직의 5개 구성 요소로 전략적 최고 관리층(전략정점), 중간계선관리층, 작업층, 기술구조, 지원 막료(참모)를 제시하였다.

③(X).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가 높은 경우 위임의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국민의 성숙도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정부 운영 방식	권위 (지시, telling)	설득 (selling)	참여 (participating)	위임 (delegating)

④(O). 베버(Weber)는 법적·합리적 권한에 기초를 둔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의 특징으로 법과 규칙의 지배, 계층제, 문서에 의한 직무수행, 비개인성(impersonality), 분업과 전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정답] ③

☞ 참고 : 2022 7·9급 알파행정학, pp.366-367, 385-386, 407-408, 470.

13. 지방분권화가 확대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2021지방7급

- ① 내생적 발전전략에 기반한 도시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 ② 중앙집권 체제가 초래하는 낮은 대응성과 구조적 부패 등은 국가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③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국가에서는 지역 간 평등한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④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정부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해설] ①(O).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은 외생적 지역발전전략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지역발전(또는 지역개발)의 추진 주체와 발전의 동인(動因), 발전성과의 귀속(歸屬) 등이 모두 지역 내에 존재하는 발전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내생적 지역발전은 국가를 비롯한 지역 외부세력이 주도하는 하향식 지역발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이 자신의 개발을 스스로 주도한다. 따라서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은 지방분권화를 바탕으로 한다. 지방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②(O). 중앙집권 체제는 국민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떨어뜨리고 권력의 집중은 부패를 야기함으로써 국가 성장을 저해한다. 지방분권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X). 지방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나 불균형이 심한 경우 이를 고착화시키거나 심화시키게 된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풍족한 자치단체에는 지원을 줄이고 열악한 자치단체는 지원을 늘림으로써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④(O). 신공공관리론은 권한위임과 지방분권을 강조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사업 재량을 확대하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정답] ③

☞ 참고 : 2022 7·9급 알파행정학, pp.813-816.

문 14. 모건(Morgan)이 제시한 조직의 8가지 이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22 지방7급

- ① 문화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Culture)
- ② 적응적 사회구조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Adaptive Social Structure)
- ③ 심리적 감옥으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Prison Metaphor)
- ④ 흐름과 변환과정으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Flux and Transformation)

[해설] ②(X). 적응적 사회구조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Adaptive Social Structure)은 셀즈닉(Selznick)이 제시한 개념이다. 셀즈닉은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강조하는 조직관에 입각해 조직을 '하나의 적응적인 사회구조'로 정의하였다. 모건(Morgan)이 제시한 조직의 8가지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G. Morgan의 조직의 이해>

- (1) 기계(Machines)로서의 조직 : 관료제, 명확하게 정해진 역할의 수행
- (2) 유기체(Organisms)로서의 조직 : 환경과의 관계 중시, 조직의 생성·성장·쇠퇴·소멸 현상
- (3) 두뇌(Brains)로서의 조직 : 정보처리와 학습 능력의 향상
- (4) 문화(Culture)로서의 조직 : 조직의 사고·가치·규범·의식·신념
- (5) 정치체제(Political System)로서의 조직 : 구성원 간의 갈등과 권력관계
- (6) 심리적 감옥(Prison Metaphor, Psychic Prisons)으로서의 조직 : 자신의 신념체계에 사로잡혀 있는 심리적·이념적 측면 강조
- (7) 유동과 변신(흐름과 변환, Flux and Transformation)으로서의 조직 : 사회생활을 형성하는 변동의 논리
- (8) 지배수단(Instruments of Domination)으로서의 조직 :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직원, 지역사회 등에 관심

[정답] ②

15. (가) ~ (라)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21지방7급

-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가)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나) 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다) 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의 단계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예산주기 또는 예산순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라) 년이다.

	(가)	(나)	(다)	(라)
①	10	3	10	1
②	5	3	10	3
③	5	5	20	1
④	10	5	20	3

[해설] ②(O).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②번이다.

-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 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10) 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의 단계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예산주기 또는 예산순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3) 년이다.

[정답] ②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659, 708, 712, 737-738.

문 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지방7급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신청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5년 간 취업할 수 없다.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설] ①(O).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공직신고자보호법).

②(X). 재산등록의무자인 취업심사대상자(6급 및 7급 공무원 중 서비스 종사자 등 일부 제외)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

③(O).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퇴직공직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재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행위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

④(O).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정답] ②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643, 646.

문 17.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 지방7급

- ①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 ②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거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③ 조정교부금은 전국적 최소한 동일 행정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다.
- ④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해설] ① (O).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②(X). 중앙정부가 국가 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거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국고보조금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전국적인 최저 생활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③(X).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광역시와 도가 시와 군에 교부하는 시·군 조정교부금과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다.

전국적 최소한 동일 행정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는 지방교부세이다.

④(X). 지방교부세는 일반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특정재원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정답] ①

☞ 참고 : 2022 7·9급 알파행정학, pp.938, 943-948.

18.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지방7급

- ① 「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은 적용받지 않는다.
- ②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전자정부의 날이 지정되었다.
- ④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해설] ①(X). 전자정부법 적용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사립대학도 적용대상이다.

<p><전자정부법 적용대상 기관></p> <p>(1) 행정기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p> <p>(2) 공공기관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등</p>
--

- ② (O).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는 국회사무총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행정기관 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 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기관별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O).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O).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정답] ①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1015-1019.

19.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지방7급

-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가 지역주민에 대해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신규 사업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예산성과금은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 ④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소요 기간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국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해설] ①(X). 정부가 지역주민에 대해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조세지출(지방세지출)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② (O).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X).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구분	성과금 지급 가능 여부		다른 사업에의 사용 가능 여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증대된 수입	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절약된 지출(예산)	가능	가능	가능	가능

④(X). 총사업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 및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 사업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 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정답] ②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667, 686, 781-784,

20. 사회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1지방7급

<p>ㄱ. 자연과학의 실험실 실험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통제집단(control group) 또는 비교집단(comparison group) 없이 진행할 수 있다.</p> <p>ㄴ. 진실형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실험을 진행하면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p> <p>ㄷ.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책 프로그램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p> <p>ㄹ.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을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할 수 없어 집단 간 동질성 확보가 불가능하면, 준실험(quasiexperiment) 방법을 채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p>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ㄱ.(X). 사회실험은 실험집단과 이에 비교되는 통제집단 또는 비교집단을 실험 실시 전에 미리 확보한 후 실험집단에는 일정한 조작(처리)을 가하고, 통제집단에는 조작(처리)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결과변수의 차이를 처리의 효과로 본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실험하는 것을 진실형 설계,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고 실험하는 것을 준실험설계라고 한다. 통제집단이나 비교집단을 확보하지 않고 실시하는 것은 비실험설계에 해당한다.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진실험	있음.	있음(동질적 집단).
준실험	있음.	있음(비동질적 집단).
비실험	있음.	없음.

ㄴ.(X). 호손효과란 실험집단이 자신들이 실험 대상자라는 인식 때문에 심리적 긴장감으로 인하여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손효과는 인위적 실험 환경에서 실험이 실시되는 진실형 설계에서 주로 나타난다.

ㄷ.(O). 실험을 실시하는 이유는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책 프로그램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평가해 보는 것은 실험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ㄹ.(O). 진실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행하는 실험을 말하고, 준실험은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고 행하는 실험을 말한다.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을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할 수 없어 집단 간 동질성 확보가 불가능하면, 준실험(quasiexperiment) 방법을 채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정답] ④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334-337.